# 교·수·회·보

137

2013_2_28



부산대학교 교수회

Faculty Council Pusan National University



# 겨울나기

도종환

아침에 내린 비가 이파리 위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어는 저녁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다

하늘과 땅에서 얻은 것들 다 되돌려주고
고갯마루에서 건넛산을 바라보는 스님의
뒷모습처럼 서서 빈 가지로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다

이제는 꽃 한 송이 남지 않고
수레바퀴 지나간 자국 아래
부스러진 잎사귀와 끌려간 줄기의 흔적만 희미한데
그래도 뿌리 하나로 겨울을 나는 꽃들이 있다

비바람 뿌리고 눈서리 너무 길어
떨어진 잎 이 세상 거리에 황망히 흩어진 뒤
뿌리까지 얼고 만 밤
씨앗 하나 살아서 겨울을 나는 것들도 있다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

137
2013_2_28
Faculty Council
Pusan National University

# 차 례

04 교수회장 인사말

07 교수회 정기총회 및 교수회장 선거

15 국립대학 발전 정책토론회

19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성명서

25 교수회 보도자료 및 발송문

31 교수회 활동
교수회 평의회
교수회 평의회 운영위원회
교수회 심의권 관련 학칙 개정

33 대학평의원회 활동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심의권 관련 학칙 개정

35 국교련 소식

36 교수칼럼
12대 교수회를 마치면서 – 이철순 교수
12대 교수회를 마치며 – 강재원 교수
꿈을 이루는 교수/여교수의 모습으로… – 이화운 교수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 – 손귀주 교수
마음먹기와 마음내기 – 김기홍 교수
病後雜感 – 강명관 교수

48 교수동정

51 부산대학교 제12대 교수회 조직 및 구성




차디찬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매화가 화사한 모습으로 피어난다.

**발행인** 이병운
**편집인** 한지숙, 우균
**발행처**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Tel. 051-510-1225 Fax. 051-515-2236
E-Mail. chairman@pusan.ac.kr
http://faculty.pusan.ac.kr
**디자인** 굳디자인연구소
Tel. 051-866-1317 www.good-d.co.kr

# 제12대 교수회를 마무리하며

2011년 3월 12대 교수회장 임기를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수회장으로서, 그리고 국교련 상임회장으로서 교수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쓴 숱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12대 교수회는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투표로 시작하여 투표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12대 교수회가 출범하자마자 전임 교수회가 개정한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교수회규정〉의 개정절차에 문제가 있어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 직접 종이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6월 13일의 총장후보자 선정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에 대한 부산시 선관위의 검찰고발과 검찰의 약식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로 교과부 인사위원회의 제청이 거부되어, 교수회에서는 11월 11일에 총장후보자 선정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처음으로 총장후보자 선정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게 된 것입니다.

2012년에는 교과부가 〈국립대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아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넣어 국립대총장들에게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강요하고, 9월에는 같은 평가지표로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국교련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대학자율성을 침탈하는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였으며(12.3.19~22.), 투표자의 93%(9,473명)가 교과부장관을 불신임함으로써 불신임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교과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수회에서는 할 수 없이 우여곡절 끝에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 방법의 확인 교원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장직선제를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교수회장의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고, 제가 재임이 되어 13대 교수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2대 교수회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위해 무려 여섯 차례의 투표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12대 교수회에서는 〈가슴으로 느끼며 발로 뛰는〉 교수회가 되기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명문국립대학 육성방안 토론회 개



**이 병 운**
교수회장

최(12.4.25.), 총장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12.6.13.), 총장의 위법적인 학칙개정에 대해 총장 사퇴권고서 전달(12.8.29.), 경암 기부금 사태에 대한 교수회 입장발표 기자회견(12.11.14.),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12.11.21.) 등과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운동,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국교련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선정에 대한 교과부 항의방문(12.5.11.),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민주당과의 공동토론회(12.6.21./7.18.),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 행정소송, 민사소송제기, 국회에 교과부장관 탄핵소추발의 및 해임건의청원과 기자회견(12.7.24.), 거점대학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12.7.26.), 국립대학 발전 대토론회(12.8.6.), 대선공약 확약을 위한 교수대회(12.10.18.), 국교련 6대 대선 어젠다 토론회(12.12.7.)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수회 평의회(운영위원회, 임원회), 각종 간담회 등 130회, 대학평의원회(운영위원회) 등 35회, 총추위회의 54회, 국교련 회의 및 간담회 30회 등 총 250회 이상의 회의와 활동을 하였습니다. 즉 주당 2.4회의 회의와 활동을 하였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처럼 12대 교수회는 혼신의 힘으로 교수들의 권익을 위해, 위기에 빠진 국립대학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차기 정부의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었습니다. 30년간 교육관료를 지냈으며 현재는 사립대학 총장이라고 합니다. 교수회와 국교련이 추구하는 대학자율성과 국립대학의 발전과는 거리가 꽤 멀어 보입니다. 13대 교수회와 국교련의 미래가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료에 의해 짓밟힌 대학자율성을 굳건히 지키고, 위기에 빠진 국립대학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13일
**교수회장 이병운 드림**









완전한 이성에 따라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He alone is free who lives with free consent under the entire guidance of reason.

–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

# 교수회 정기총회 및 교수회장 선거

(2012. 12. 12)

-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공고**
  2012. 11. 1.
-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
  2012. 11. 26.
- **2012년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공고**
  2012. 11. 28.
- **2012년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및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실시**
  2012. 12. 12.
-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당선자 공고**
  2012. 12. 13.
-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당선자 확정 공고**
  2012. 12. 17.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공고

##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명 :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2. 선거일 : 2012년 12월 12일(수요일)
3. 선거권자 :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원, 단 휴직자와 6월 이상 장기 출장자는 제외(교수회 회칙 제3조, 제16조 의거)
4.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가. 열람기간 : 2012년 12월 5일(수)부터 2012년 12월 7일(금)까지 (3일간)
   나. 열람장소 : 교수회 사무실(교수회관 2층)
   다. 열람권자 : 선거권이 있는 자
   라.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거나 선거권자가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5. 후보자등록 신청
   가. 신청기간 : 2012년 11월 22일(목) ~ 2012년 11월 23일(금) 17시까지 (2일간)
   나. 등록장소 : 교수회 사무실(교수회관 2층)
   다. 신청방법 : 입후보등록 서류(교수회 소정양식)를 갖추어 신청함
6. 선거운동의 방법
   가. 선거운동기간: 선거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나. 선거공보의 배부
   다. 지상토론 자료의 인터넷 게시
   라. 합동연설회
   마.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7. 투 ·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 투 · 개표소 명칭
   :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투 · 개표소
   ○ 투 · 개표 장소

| 캠퍼스 | 장 소 |
|---|---|
| 밀양캠퍼스 | 행정지원본부 중강당 |
| 아미캠퍼스 | 의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 |
| 양산캠퍼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4층 세미나실 |
| 부산캠퍼스 | 10.16 기념관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수회 사무실(051-510-1224~5)로 문의 또는 교수회 홈페이지(http://faculty.pusan.ac.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일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의 입후보자와
선거일 및 투표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수회장 입후보자 명단

| 기호 |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
| 1 | 이 병 운(李炳云)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1954. 9. 30. (만 58세) |
| 2 | 홍 봉 희(洪鳳憙) | 공과대학 정보컴퓨터공학부 | 1959. 2. 27. (만 53세) |
| 3 | 안 원 하(安元河)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 1960. 11. 28. (만 51세) |

2. 선 거 일 : 2012년 12월 12일(수) 14시

3. 투 · 개표소

| 캠퍼스 | 장 소 |
|---|---|
| 밀양캠퍼스 | 행정지원본부 중강당 |
| 아미캠퍼스 | 의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 |
| 양산캠퍼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4층 세미나실 |
| 부산캠퍼스 | 10.16 기념관 |

2012년 11월 26일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부산대학교 제12대 교수회
#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공고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칙」 제15조에 의거 전체교수회 정기총회의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수회와 대학 발전을 위해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오후 2시

2. 장  소
   - ○ 부산캠퍼스: 10.16 기념관
   - ○ 아미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세미나실
   - ○ 양산캠퍼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중앙진료동 4층 세미나실
   - ○ 밀양캠퍼스: 행정지원본부 중강당

3. 주요 내용
   - ○ 제12대 교수회 사업 보고
   - ○ 제13대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선출
   - ○ 기타

2012년 11월 28일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 2012년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 및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실시










2012년도 전체교수회 정기총회와 제13대 교수회장 선거가 2012년 12월 12일(수) 오후 2시, 장전캠퍼스, 아미캠퍼스, 양산캠퍼스, 그리고 밀양캠퍼스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12대 교수회 업무보고와 회계보고, 그리고 감사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실시된 제13대 교수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소견 발표 후,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졌다.

이날 총 641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쳐 기호 1번 이병운 후보가 당선되었다. 12월 15일(토)까지 이의신청이 없었던 바, 이병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어 제12대 교수회장에 이어 제13대 교수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다.

#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당 선 자 공 고

2012년 12월 12일 실시된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의 선거결과 및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차 투표결과

○ 출석인원: 641명, 투표자수: 582명, 기권: 59명, 무효표: 3표

| 기호 | 후보자명 | 득표수 | 득표율 |
|---|---|---|---|
| 1 | 이 병 운 | 214 | 33.39% |
| 2 | 홍 봉 희 | 190 | 29.64% |
| 3 | 안 원 하 | 175 | 27.30% |

*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

2. 결선 투표 결과

| 기호 | 후보자명 | 득표수 |
|---|---|---|
| 1 | 이 병 운 | 235 |
| 2 | 홍 봉 희 | 227 |

* 다수 득표자: 이병운 후보

3. 교수회 회칙 제9조 2항에 따라 국어교육과 이병운 교수가 다수 득표를 기록하여 제13대 부산대학교 교수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함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12월 15일 24: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혹은 e-mail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 당 선 자 확 정 공 고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선출에 관한 평의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이의 신청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제13대 교수회장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호 | 성명 | 소속 |
|---|---|---|
| 1 | 이 병 운 교수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2012년 12월 17일

**부산대학교 제13대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 회의록은 교수회 홈페이지에 게재 (http://faculty.pusan.ac.kr)

Ⅰ. 선거관리위원회

| 회의 | 일시 | 주요 안건 |
|---|---|---|
| 제1차 | 2012. 11. 23.(금) 17:30 |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고 문안 확정, 캠퍼스 간 거소투표제 실시 결정 |
| 제2차 | 2012. 12. 4.(화) 17:00 | 정기총회 및 교수회장 선거 투 · 개표 일정 확정, 1차 투표 미참여자의 결선 투표 참여 불가 결정, 투표소 등록 관리위원 및 투 · 개표 관리위원 명단 확인 및 업무 조정 |
| 제3차 | 2012. 12. 10.(월) 16:00 | * 제40차 교수회 평의회와의 연석회의<br>정기총회 출석 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투 · 개표 관리위원 명단 확인 및 업무 분담, 정기총회 안건 상정(본부에 교수회의 학칙개정 원안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교수회비 인상) |

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 회의 | 일시 | 주요 안건 |
|---|---|---|
| 제1차 | 2012. 10. 23.(화) 12:00 | 선거 공고 문안 검토, 투 · 개표 방식 및 투표 장소 결정, 후보자 지상 토론회 질의서 구성 및 배부 논의, 합동연설회 화상중계 실시 결정 |
| 제2차 | 2012. 11. 23.(금) 17:00 | 제13대 교수회장 선거 입후보자 간담회 및 기호 추첨 |
| 제3차 | 2012. 11. 29.(목) 17:00 | 1차 투표 · 결선 투표 · 재투표 실시 규정 확인, 1차 투표 미참여자의 결선 투표 참여 불가 결정, 합동연설 시간 배정 및 순서 결정, 교수회장 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확인 및 답변 검토 |

# 국립대학 발전 정책토론회

(2012. 12. 7)

- 「국립대학 발전 정책토론회」 보고서
  국교련, 2012. 12. 7.
- 이명박 정부 교과부의 '국립대학 유린'을 규탄한다
  국교련, 2012. 12. 10.

# 「국립대학 발전 정책토론회」 보고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2012년 12월 7일(금) 오후 2시, 서울 흥사단 3층 강당에서 「국립대학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18일에 열렸던 「전국국공립대학교수대회」에서 선포한 바 있는 '국교련 6대 정책 어젠다'에 대한 대선후보측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이병운 국교련 상임회장의 개회사와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창록 국교련 정책위원장이 '국교련 6대 정책 어젠다'의 내용을 발제하였다. 각 대선후보 캠프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정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장과 나승일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어젠다'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총 론

● **이정우 위원장(문재인 후보측):**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은 대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나온 폭력이다. 인간은 자존심이 있는 존재이므로 경쟁만으로는 효율이 생기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지식인인 대학교수에게 경쟁만을 강요하는 것은 경쟁지상주의 역사상 최악의 파탄사태이다. 전체적으로 교과부 폐지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외하고는 국교련 어젠다를 모두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 **나승일 위원(박근혜 후보측):** 우리나라 대학은 위기상황에 있다. 대학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도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적 · 질적 발전, 대학간 전략적 제휴, 재정 확충,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 국제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재정지원 확대, 합리적인 특성화 및 구조개혁 추진, 일자리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 어젠다 1: 교과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자율형 국립대학 정책 추진

● **이정우 위원장(문재인 후보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찬성한다. 다만 교과부 폐지가 초래할 혼란에 대한 일반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점진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교과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승일 위원(박근혜 후보측):**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집행기관은 아니며, 장기적인 방향 설정,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교과부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대학지원청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 어젠다 2: '반값 등록금' 실현

● **이정우 위원장(문재인 후보측):** 찬성한다. 이미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문재인 후보도 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점차 사립대로 확산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립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전제로, 사립대 학생들에게도 국립대 학생의 감액 금액만큼 감액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보다 부합된다고 본다.

● **나승일 위원(박근혜 후보측):** 찬성한다. 다만 소득 연계 반값 등록금을 추진할 것이다.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소득 8분위까지 25% 정도를 지원하며, 9분위와 10분위는 교

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립대-사립대 구분 없이 2014 년에 2011 년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 어젠다 3: 국립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 **이정우 위원장(문재인 후보측)**: 법인화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예산을 연계한 '총장직선제 폐지' 강요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학장 추천을 받지 말라는 대통령령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후진국에서도 비웃을 넌센스이다. 교수회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법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쿠데타의 잘못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

● **나승일 위원(박근혜 후보측)**: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직선제는 장단점이 있고, 총장 · 학장 직선제 폐지는 나름대로 대학에서 동의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다. 교과부가 대학의 자율보다 책무성을 많이 챙긴 나머지,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비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재정지원과 대학평가를 앞세워서 대학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 어젠다 4: 권역별 국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 **이정우 위원장(문재인 후보측)**: 적극 찬성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몇 년간 시행하면 서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추월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다만 우수한 사립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나승일 위원(박근혜 후보측)**: 반대한다. 현시점에서도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국공립대학을 2류로 만들 우려가 있다. 지방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어젠다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제화

● **이정우 위원장(문재인 후보측)**: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의 목표는 내국세 수입 총액의 6%, 장기목표는 8.4%이다. 목표치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나승일 위원(박근혜 후보측)**: 반대한다. 재정지원법은 검토할 수 있다. OECD 평균 이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 어젠다 6: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및 합리적인 평가 · 보수 체계 정립

● **이정우 위원장(문재인 후보측)**: 성과급적 연봉제는 만인을 늑대로 만드는 매우 야만적인 제도이다.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도 교수들을 서로 적으로 만든다고 비판받는 제도인데, 하물며 공동체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구나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반드시 폐지해야하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폐지하도록 건의할 것이다.

● **나승일 위원(박근혜 후보측)**: 기존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립대 교수들만 실시하지 않기는 어렵다. 성과급적 연봉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명박 정부 교과부의 '국립대학 유린'을 규탄한다

1.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국립대학 유린'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국립대학제도과장이 전결 형식의 공문을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보내, '총장직선제 폐지'를 못 박는 세부규정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강박하는, 실로 믿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학 유린'을 준엄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 지난 11월 13일 교과부는, '국립대학제도과장 장보현'의 전결 형식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MOU를 체결한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등 자체 규정을 우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속히 제·개정하여 제출(MOU 상 제출시한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11월 12일에는 국립대학의 교무처장과 사무국장들을 모아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을 공식적 선거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 구성원 일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을) 지양"하라며 규정의 내용까지 지시했다. "교원정원 배정 등"으로 겁박하면서 총장직선제의 여지를 철저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국립대학의 규정을 제·개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3. 교과부는, 12월 3일에는 역시 '국립대학제도과장 장보현'의 전결 형식으로 MOU를 체결하지 않은 6개 국립대학(경북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총장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여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강변하면서 "적어도 내년 신학기 이전까지 세부규정 정비를 마무리"할 것과 그 "추진일정 등 후속조치 계획을 2012.12.14.(금)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립대학들은 규정에 관해 어떠한 약속도 한 바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시한을 못 박아 규정을 제·개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여타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했으니,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도 "교원정원 배정 등 인센티브 연계"나 "공식적 선거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 구성원 일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 지양"을 '공평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 국립대학 학칙의 제·개정은 1952년부터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다가, 1998년부터 「고등교육법」에 의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와 동시에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장관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21일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항, 2012년 1월 22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의 해당 조항이 각각 삭제됨으로써, 국립대학 학칙의 제·개정은 전적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5. 학칙의 제·개정이 전적으로 국립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니, 그 하위에 있는 규정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교과부는 국립대학의 규정을 일정한 방향으로 제·개정하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MOU를 체결한 국립대학들의 경우에도, 만일 MOU가 교과부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MOU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6. 우리 국교련은, 교과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제·개정하라고 강요하는, 실로 심각한 '국립대학 유린' 사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국립대학 총장들도 교과부의 이러한 탈법적인 강요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12월 1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성명서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5개 단과대학 교수 일동, 2013. 1. 16.
-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인문대학 교수 일동, 2013. 1. 18.
-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동, 2013. 1. 23.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즈음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교수업적 자료 제출 대상 교수 120명 일동, 2013. 2. 6.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들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대평가제에 기반한 상호약탈적 급여 방식으로서 교수들을 무한경쟁에 몰아넣어 대학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다. 이러한 급여 방식은 교수들이 교육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재직 시의 급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퇴직 후의 연금과도 연동되어 많은 교수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2011년에는 전체 교수의 80%가 반대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의 일부 교수와 교수회장 등은 끝까지 교수업적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이 운동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이제 2013년부터 2012년 12월 현재 조교수, 부교수 직위 교수를 대상으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더욱 본격적으로 시행될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우리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제통상대학, 예술대학의 교수업적 자료 제출 대상 교수들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5개 단과대학의 교수업적 자료 제출 대상 교수들은 우리의 결의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부산대 김기섭 총장은 자신의 공약대로 우리 교수들의 결연한 의지를 헤아려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부산대 이병운 교수회장은 자신의 약속대로 국교련과 연대하여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부산대 5개 단과대학 이외의 단과대학과 전국 국공립대학의 교수업적 자료 제출 대상 교수들도 우리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2015년에 교수업적 자료 제출 대상이 되는 부산대 선배 교수들도 우리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3. 1. 16.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제통상대학, 예술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교수업적 자료 제출 대상 교수 88명 일동**

#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난 해 신임교수에 이어 2013년 부교수까지 확대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근본적으로 학문공동체인 대학의 분열을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폐단을 안고 있다. 인문대학 교수들은 이미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비인간적이고 상호약탈적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들로 하여금 "자발적 동기"에서 우러난 연구가 아니라 평가 자체를 위한 업적 양산을 강요하고 있다. 아무리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다고 해도 산술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이와 같은 계량화된 줄 세우기는 학문의 본질과 자율성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많은 편법과 부작용을 야기하여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들간의 "발전적" 경쟁이 아니라 "상호약탈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한다. 이 제도는 상대적 성과에 기초하여 등급을 매김으로써 학문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그 결과 이 제도의 도입 목적과는 정반대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학문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초학문이나 융합학문 등 중장기적 연구의 발전을 저해한다. 매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단기적 성과의 양산에 얽매이게 되어, 깊은 성찰과 오랜 사유가 필요한 저서 및 역서 등 인문학의 중요한 연구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넷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엇보다 조화로운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을 와해시키고 동료교수간에 경쟁과 불화를 조장한다. 또한 대학교육 전반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 인문대학 교수들은 학문과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 첫 실천의 하나로 평가기준안 및 평가자료의 제출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시 폐지하라.

둘째, 부산대학교 총장 및 대학본부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하라.

셋째,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성과급적 연봉제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실천하라.

2013. 1. 18.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일동**

#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11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업적에 따른 충분한 평가에 기반하여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산대 교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상호약탈적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부를 천명하고, 반대서명운동 및 교수업적자료 제출 거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사회대 교수들도 이미 2010년 12월과 2011년 6월의 교수회의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 국비성과급 수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일부 교수님들은 2011년 국비성과급 수령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부교수 이하까지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대 교수들은 지난 2012년 12월 20일 전체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을 강력 반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를 위한 업적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각 단과대학 및 교수회가 성과급적 연봉제 거부운동에 지속적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3. 1. 23.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일동**

#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즈음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

박근혜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에 연명한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들은 원칙과 신뢰, 사회대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새로운 대학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국립대학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하여 그 위상이 나날이 떨어지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들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국립대학 교수들은 지방 국립대학을 살려야만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강조하는 사회대통합도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대학정책으로 지방 국립대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대학정책 가운데 교수들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어긋나는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입니다. 특히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평교수들을 막론하고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실시로 대부분의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정든 학교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지난 2011년 1월 정부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일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강력한 서명운동을 두 차례에 걸쳐 벌였고, 서명 인원은 무려 9,482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정원의 60%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 3일에는 이 정책을 규탄하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궐기대회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성과급적 연봉제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전달하고 폐지를 요구해 왔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와 국립대학을 교과부의 산하기관 쯤으로 여기는 교과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정책 마인드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특히 이 정책의 위헌성에 주목하고 2011년 5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개월이면 판결을 내리게 되어있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 8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아 현재 대학 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국교련 회장단을 통하여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 있는 저희 교수들은 현행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차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적인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2013년 2월 현재까지도 교과부는 2013년도에 적용할 성과 연봉의 누진 비율이나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제도의 시행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서는 2012년도부터 적용된 신임 교수들의 2013년도 연봉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별도의 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호봉제 하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제로섬(Zero-Sum)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교수들이 평생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지 않으면 호봉제보다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게 되어 이 제도는 교수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하에서도 국립대학 교수들의 급여는 대부분의 사립대학 교원들의 급여보다 더 적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직 시의 줄어든 연봉이 연금에도 연동되어 퇴직 후에도 금전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연구결과들이 한결 같이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유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용역과제마저 "성과급이 대학 교원들의 효과성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변기용 외 5인, 2011: 교과부 최종보고서). 영국 공무원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Marsden, 2004)에서도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유발 효과가 없으며, 보상체계의 질과 개인의 성과 또한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들의 연봉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평가제로서 교수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합니다. 실용학문, 기초학문 등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문분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 차원의 평가단위 내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같은 전공의 학과 내에서도 세부전공은 각기 다르며 교수들은 매우 다른 성격의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수들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초래되어 교수공동체는 붕괴 일보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교과부 용역과제도 "교원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함으로써 국립대학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연봉이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되는 누진제 성과급제로서 일부 교수들을 아예 학교사회에서 낙오자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성과가 좋지 않은 교수들은 아예 업적관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들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성과급제의 애초의 취지와 크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국내외 어떤 대학에서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유사한 제도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화된 울산과학기술대학에서도, 얼마 전까지 국립대학이었고 현재도 교과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도 이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인 중앙대학교의 제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혹한 기준과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조사한 부산대학교 교수회의 연구결과도 이들 나라들이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서혜애 외 4인, 2012).

마지막으로, 호봉제보다 못한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은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우수한 교수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립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그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그 기대효과 또한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제 아래에 연명한 우리 부산대학교 교수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전적인 정책을 새로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들은 결코 사회 일각에서 말하는 "철밥통"에 안주할 생각도 없으며, 교수들 간의 경쟁을 회피할 추호의 생각도 없습니다. 이미 부산대학교에서는 국비에서 제공되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교수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국립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차기 정부에서도 강압적으로 시행된다면, 개인적으로 입게 될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마지막 반대의사 표시로서 연봉 산정을 위한 교수업적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의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립대학이 제대로 서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충정의 발로로 보시고,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3. 2. 6.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생활환경대학, 예술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교수업적 자료 제출 대상 교수 120명 일동**

# 교수회 보도자료 및 발송문

- **경암 기부금 소송사건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교수회, 2012. 11. 14.
- **송년인사 드립니다**
  교수회, 2012. 12. 29.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회, 2013. 2. 1.

# 경암 기부금 소송사건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경암 기부금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발전기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부자 면담과 자료조사를 실시했고 대법원의 판결과 본 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교수회의 입장을 밝힌다.

기업이나 개인이 대학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최고의 지성 집단인 대학의 정신과 역할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교육, 연구, 봉사에 대한 대학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기부자의 숭고한 정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세속적 기부와는 근본적으로 기부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인류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대학에 기부를 하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우리는 존경과 칭송해 마지않는 것이다. 이에 기부라는 혜택을 입은 대학으로서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것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않고, 기부금을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경암 재단에서는 우리사회에 기부문화가 일반화되지 않던 시절이었던 2003년, 305억이라는 국내 역대 최고액이라는 발전기금을, 좀처럼 모금이 어렵던 지역대학인 부산대학의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흔쾌하게 기부를 하였다. 하지만 전임총장이 기부금을 경암재단의 본래 목적이었던 숭고한 뜻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사용하자, 더 이상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소송사태에 이른 것이다. 부산대학이 기부금의 기부목적외 사용으로 기부자와 소송사태에 이른 것은 부산대학으로서는 그 기부목적의 진실은 차치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커다란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기부자가 이러한 진실규명을 위해 눈물로서 부산대학 구성원들에게 그간의 상황을 간곡하게 호소하였건만, 대학의 구성원 대부분은 기부자의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도 전하지 못했다.

그동안 전임 부산대 교수회는 기부금 사용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경암 재단과 대학본부 사이에 불미스러운 논란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진상규명과 그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늦은 시점에 와서야 교수회 차원에서 그 기부목적의 진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입장표현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먼저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지성의 집단인 우리대학에서 기부자와 대학이 소송에까지 이른 것은 부산대학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이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수회에서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기부자의 뜻을 저버리고 소송사태에 이르게 되어 심대한 고통을 기부자에게 안기게 한 것에 대해 부산대학 구성원을 대표하여 경암 송금조 선생과 진애언 여사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이다.

이에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전기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수회는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기부한 경암재단의 기부금을 기부자의 기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기부금의 기부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진실규명문제로 기부자와 소송에까지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총장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기부자를 찾아뵙고 진심어린 사과로 기부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가 기부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 부산대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대학이 기부 당시 기부자에게 스스로 약속한 예우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넷째,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부산대학은 기부금 관리 체제를 재검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대하여 기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2. 11. 14.

**부산대학교 교수회 평의회**

# 송년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교과부장관의 불신임투표로 시작하여, 총장직선제의 존치여부를 확인하는 투표, 교수회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올해는 투표로 시작하여 투표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한 대학자율을 말살하는 대학정책을 국립대학에 강요해왔습니다. 그것도 행정권을 남용한 행 · 재정적 지원과 제재를 미끼로 강요해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대학을 비롯한 모든 국립대학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지금까지 교과부가 해왔던 부당한 대학정책을 국립대학에 편법으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비롯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OECD 평균인 GDP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대학을 위하여 지방대학발전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거점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밖에 총장직선제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였으나, 불행히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 교수회와 국교련에서는 성과연봉제의 폐기를 위한 노력을 새 정부에서도 계속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직선제의 복원을 요구하며 부산대학을 걱정하는 교수들이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도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연말 예산배정과 교수충원 등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는 대학본부로서는 농성교수들의 요구를 해소할만한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수회에서는 교수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칙개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총장에게 사퇴권고서를 전달하였으며, 학칙개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교수회 임원진은 개별적으로 원로교수들의 총장직선제 원상회복을 위한 철야농성에 동참하여 대학본부에 총장직선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성의 장기화로 인해 농성교수들의 건강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농성교수들의 뜻이 이미 대학본부는 물론 정부와 언론에도 충분히 알려졌음을 감안할 때, 석 달이 넘도록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의 자율을 위해, 전 국립대학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준 원로교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이제 연구실로 돌아갈 것을 정중히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교수회에서는 현 정부가 끝나는 2월말을 기준으로 총장직선제 원상회복을 위한 일정을 대학본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만일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본부가 총장직선제 원상회복을 위한 학칙개정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교수회에서는 내년 9월에 총장직선제 원상회복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만일 총장이 총장직선제 회복을 골자로 하는 교수회의 학칙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교수회에서는 교수들의 총의로써 총장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새로 구성되는 13대 교수회는 이제 명실 공히 실질적인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칙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주요보직자 임명, 대학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권을 교수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단과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수회 평의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수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세대와 계층과 이념 등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나뉘어 있는가를 실감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상황 또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사회통합이듯이, 우리 대학의 구성원 또한 어려운 대학의 처지를 함께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나아가 부산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대학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 12. 29.

**교수회장 이병운 드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께

교수회와 국교련에서는 지난해 10월 18일에 국교련의 주요 정책(6대 어젠다)을 양당 대선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고(이 자리에 인수위원회 교육분과 곽병선 간사가 새누리당 대표로 참석하였음), 12월 7일에는 양당의 대선본부 교육정책 담당자인 새누리당 나승일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민주통합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교련의 6대 정책어젠다 중 총장직선제 폐지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직접 제출하였고, 1월 30일에는 서울에서 국교련 회장단 8명과 교육분과 인수위원을 만나 두 시간 동안 국교련의 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과부가 전혀 준비 없이 실행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지하고, 문제점을 다년간 면밀히 연구한 뒤에 국교련과 협의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총장직선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학 자율성의 하나인데 행정관료가 행정지시로 폐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당한 대학평가와 행정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재정부족과 인재유출로 고사 직전의 상태에 있는 지역 국립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지역 국립대학의 육성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5월에는 국교련이 헌법재판소에 성과연봉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9,482명의 국립대학 교수들이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 전국교수대회를 열기도 하였고, 2012년에는 교과부장관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가결하고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발의와 해임건의를 청원하였다는 것도 인수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수회와 국교련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며, 국교련과 함께 새 정부의 국립대학정책을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직접 제시하시어, 교육분과 인수위원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와 총장직선제 폐지, 그리고 지역 국립대학의 심각한 상황 등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과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교련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교수들이 직접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2. 1.

**교수회장 이병운 드림**

# 교수회 활동

* 회의록은 교수회 홈페이지에 게재 (http://faculty.pusan.ac.kr)

## Ⅰ. 교수회 평의회

| 회의 | 일시 | 주요 안건 |
|---|---|---|
| 제37차 | 2012.10.30.(화) 17:00 | 정기총회 일정 및 안건 논의, 교수회장 선거 준비상황 점검 |
| 제38차 | 2012.11.6.(화) 17:00 | 제13대 교수회장 선거운동규정 의결, 정기총회 상정 안건 논의(교수회 규정(안) 마련, 교수회비 인상) |
| 제39차 | 2012.11.13.(화) 16:00 | 교수회 발전기금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관련 논의 |
| 제40차 | 2012.12.10.(월) 16:00 | *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연석회의<br>정기총회 출석 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투 · 개표 관리위원 명단 확인 및 업무 분담,<br>정기총회 상정 안건 논의(본부에 교수회의 학칙개정 원안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br>교수회비 인상 등) |
| 제41차 | 2012.12.26.(수) 12:00 | 정기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교수회비 인상, 교수회 관련 학칙개정 건),<br>교수회 동계연수회 개최 추진, 총장직선제 폐지 농성 관련 논의 |
| 제42차 | 2013.1.17.(목) 16:00 | 학생정원 조정, 교육과정 개편, 학사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및<br>규정 개정(안) 심의, 감사자체규정 심의 |
| 제43차 | 2013.2.25.(월) 13:00 | 학칙 제30조 4항 2호 "부총장, 처장, 입학관리본부장, 대외교류본부장,<br>R&D미래전략본부장의 임명"에 관한 심의 |

## Ⅱ. 교수회 평의회 운영위원회

| 회의 | 일시 | 주요 안건 |
|---|---|---|
| 제30차 | 2012.10.30.(화) 12:00 | 정기총회 일정 및 안건 논의, 교수회장 선거 준비상황 점검 |
| 제31차 | 2012.11.13.(화) 12:00 | 교수회 발전기금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관련 논의, 정기총회 상정 안건 논의 |
| 제32차 | 2012.11.23.(금) 11:00 | 교수회 관련 학칙개정(안) 심의 결과 검토, 정기총회 상정 안건 논의(교수회비 인상, 제13대 교수회장 선출 등) |
| 제33차 | 2012.12.18.(화) 12:00 | 제13대 교수회 평의원 추천 일정, 정기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교수회비 인상, 교수회 관련 학칙개정 건), 교수회 세미나 및 동계연수회 개최 추진 |
| 제34차 | 2013.1.18.(금) 12:00 | 「부산대학교 학칙」 외 4개 규정 일부개정(안) 심의, 「부산대학교 자체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안) 심의 |
| 제35차 | 2013.2.4.(월) 14:00 |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심의 |
| 제36차 | 2013.2.21.(목) 11:00 | 강의료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종합인력개발원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교양교육원규정 제정(안), 교육인증지원센터규정 제정(안) 심의 |

## Ⅲ. 교수회 심의권 관련 학칙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2012.12.18. 공포) |
|---|---|
| **제30조(교수회)**<br><br>①「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교수회를 둔다.<br>②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성한다.<br>③ 교수회에 교수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평의원으로 구성하는 평의회를 둔다.<br>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br>1.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br>2. 〈삭제〉<br>3. 그 밖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br>⑤ 회장과 평의원의 선출 및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30조(교수회)**<br><br>①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br>② 〈삭제〉<br>③ 교수회는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둔다. 평의회는 의장 · 부의장 · 단과대학(전문대학원)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된다.<br>④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br>1. 학칙 및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br>2.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입학관리본부장, 대외교류본부장의 임명<br>3. 교원의 신분 · 캠퍼스 환경 등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br>⑤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br>1. 교수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br>2. 〈삭제〉<br>3. 그 밖에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br>⑥ 회장과 평의원의 선출 및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 규정」으로 정한다. |
| **제31조(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의)**<br><br>④ 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br>1. 교육과 연구<br>2. 예산<br>3. 학칙과 모든 규정의 제정안과 개정안<br>4. 학과(부) · 전공 간의 조정<br>5. 입학, 수료 및 졸업<br>6. 학생의 징계<br>7.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 | **제31조(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의)**<br><br>④ 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br>1. 교육과 연구<br>2. 예산<br>3. 학칙과 모든 규정의 제정안과 개정안<br>4. 학과(부) · 전공 간의 조정<br>5. 입학, 수료 및 졸업<br>6. 학생의 징계<br>7.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br>8. 단과대학 평의원이 요청하는 사항 |

# 대학평의원회 활동

* 회의록은 교수회 홈페이지에 게재 (http://faculty.pusan.ac.kr)

## Ⅰ. 대학평의원회

| 회의 | 일시 | 주요 안건 |
|---|---|---|
| 제13차 | 2012.11.21.(수) 17:00 | BTO사업 관련 해지시지급금 마련 방안 논의 |
| 제14차 | 2012.12.10.(월) 17:00 | 2012학년도 제2회 기성회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심의 |
| 제15차 | 2013.1.17.(목) 15:00 |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심의<br>(학생정원 조정, 교육과정 개편, 학사 관련 규정 등) |
| 제16차 | 2013.2.4.(월) 16:00 |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심의 |
| 제17차 | 2013.2.25.(월) 14:00 | 2013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 · 세출 예산편성(안) 심의 |

## Ⅱ. 대학평의원회 운영위원회

| 회의 | 일시 | 주요 안건 |
|---|---|---|
| 제18차 | 2012.11.21.(수) 16:30 | BTO사업 관련 현재 학교 상황과 대책 마련 논의 |
| 제19차 | 2012.12.10.(월) 15:45 | 2012학년도 제2회 기성회회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심의 |
| 제20차 | 2013.1.17.(목) 14:30 |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심의<br>(학생정원 조정, 교육과정 개편, 학사 관련 규정 등) |
| 제21차 | 2013.2.4.(월) 15:30 |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및 관련 규정 개정(안) 심의 |
| 제22차 | 2013.2.25.(월) 14:30 | 2013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 · 세출 예산편성(안) 심의 |

## Ⅲ. 대학평의원회 심의권 관련 학칙 개정

| 개정 전 | 개정 후 (2012.12.18. 공포) |
|---|---|
| 제29조(대학평의원회)<br><br>④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 예산과 결산<br>2. 대학(원), 학과(부)나 전공의 설치와 폐지<br>3. 처 · 국, 대학(원) 행정실 및 지원 · 부속시설의 설치나 폐지. 다만, 산학협력단 소관 지원 · 부속시설은 제외한다.<br>4. 대학 장기발전계획<br>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관한 사항<br>6.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br>7. 의장이나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제29조(대학평의원회)<br><br>④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 예산과 결산<br>2. 학칙의 개정 〈신설〉<br>3. 대학(원), 학과(부)나 전공의 설치와 폐지<br>4. 처 · 국, 대학(원) 행정실 및 지원 · 부속시설의 설치나 폐지. 다만, 산학협력단 소관 지원 · 부속시설은 제외한다.<br>5. 대학 장기발전계획<br>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관한 사항<br>7.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br>8. 의장이나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 제85조(학칙개정)<br><br>① 학칙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한다.<br>② 각 부서의 장은 학교운영상 학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주관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br>③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발의한 날부터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br>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br>⑤ 학칙개정안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 공포한다. | 제85조(학칙개정)<br><br>① 학칙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한다.<br>② 대학(원)장, 부속시설 등 기관장, 전임교원 100인 이상은 학교운영상 학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br>③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발의한 날부터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br>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br>⑤ 학칙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 공포한다. |

# 국교련 소식

## Ⅰ. 국교련 임시총회

| 회의 | 일시 | 장소 | 주요 안건 |
|---|---|---|---|
| 제6차 | 2012.12.7.(금) 16:00 | 서울 | 「국립대학 발전 정책토론회」에 이어 개최<br>워크숍 및 정기총회 일정, 각 대선본부의 공약에 대한 국교련 입장 논의 |

## Ⅱ. 국교련 회장단 회의

| 회의 | 일시 | 장소 | 주요 안건 |
|---|---|---|---|
| 제8차 | 2012.11.15.(목) 16:30 | 경남과기대 | 문재인 선거대책위 교육특위 자문위원 추천 논의, 임시총회 및 고등교육 정책토론회 개최 논의, 워크숍 일정 논의 |
| 제9차 | 2013.1.7.(월) 12:00 | 대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대비, 정기총회 상정 안건 논의, 워크숍 주제 및 발표자 선정, 교육대학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












# 12대 교수회를 마치면서

질풍노도와 같던 12대 교수회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필자는 사회대 평의원으로 사회대 교수들에 의하여 半강제적으로(?) 선출되어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교수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성과연봉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다소 거창한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고,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기획간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총무간사의 일을 맡게 되었다. 약 3개월간의 공백 기간은 있었으나 근 2년 동안의 교수회 활동을 통해 느낀 소회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국립대학의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국립대의 위상과 성격을 완전히 뒤흔들어놓는 성과연봉제, 법인화 등의 문제가 대두하더니 급기야 총장직선제 폐지까지 거론되었다. 성과연봉제는 많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총장직선제도 이제는 학칙이 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폐지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평교수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으나 그들의 의사는 교과부나 학교 당국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두 번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엄청난 압력이다. 교수회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 본부 보직자 교수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과부는 행 · 재정적 수단을 통해 본부 보직자 교수들을 압박하고 이들은 다시 교수회를 압박한다. 교과부는 언제나 직접 나서지 않고 본부 보직자와 교수회를 대립하게 만들고, '자율' 운운하면서 모든 교과부의 정책은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선전한다. 성과연봉제 반대운동,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운동을 할 때 그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 번째, 교과부는 교수회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교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교수회가 엄연히 학칙에 들어 있는 법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를 마치 임의단체인 것처럼 다루려는 저의가 보인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평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본부 지원 회의비를 포함한 각종 경상보조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교수회의 재정이 열악해지면 교수회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지방 국립대의 외부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많은 교수들은 부산대학교가 국립대이고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교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도 지방 국립대의 처지를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대가 법인화함으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립대는 '지방' 국립대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 대 지방의 차원에서 양극화되어 있다. 교과부 관료, 조 · 중 · 동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전국지, 주요 사립대학들은 중앙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하고, 이 세력들은 견고하게 뭉쳐져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가 성과연봉제 반대운동을 할 때 뼈저리게 느낀 점이다. 특히 중앙의 언론들은 지방의 국립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지방 국립대보다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철순**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섯 번째, 앞으로 교수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대학의 외부조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무한경쟁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중앙권력은 지방 국립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평교수들의 권익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해주던 총장직선제마저 폐지될 운명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수회가 평교수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필자는 교수회가 평교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여섯 번째,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평교수들은 교수회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교수회장을 비롯하여 교수회 임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점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수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교수회를 직장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여기고 있다.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점은 13대 교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일곱 번째, 교수들이 학교 일에 대하여 좀 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에 사립대학교와는 달리 오너십이 약하다. 누가 학교의 주인인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수 개인들의 권리주장은 강한데,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다소 느슨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할 주체가 분명치 않다. 본부도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대해 학교 공동체를 위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힘든 처지이며,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개별 학과나 단과대학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기도 한다. 학교의 공공선을 위해 교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산대학교가 '내 학교'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부산대학교는 앞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각성과 더불어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1월 31일에 열린 전체 학과장 회의에서 우리 대학교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액센츄어)의 보고가 있었다. 상당수의 학과들이 최하위인 C그룹으로 평가되어 대외적인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은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교수들이 각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항상 이러한 평가를 할 때 다른 대학과의 '산출'에 대한 비교만 있지 '투입'에 대한 비교가 없었다. 지금 서울대학교나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와 우리 대학교의 예산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교의 예산은 5,000억 원이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은 교수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단기적으로 우리 대학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 투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적인 해결책밖에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국립대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총장, 교수회장이 앞장서야 할 것이고, 평교수들은 이들에게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 하에서 국립대학들 간의 도토리 키 재기 식의 자원배분은 의미가 없고, 지방 국립대학 지원과 관련된 '판'을 다시 깔아야 한다. 이 작업이 병행되지 않는 한 부산대학교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에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 12대 교수회를 마치며



1. 남 따라

'다사다난'. 지난 2년을 회상하면 생각나는 말. 아마 부산대 구성원들 모두 동일한 회포에 잠길 것이다. 두 번의 총장선거, 기부자와의 법정소송, 전임총장 구속수사, 두 차례 상경 교수궐기대회와 시위, 교과부장관 불신임 투표, 직선제 존치 투표, 총장실 점거농성, 효원굿플러스 문제, 정문입구와 공학관 신축 논의 등등. 대학이 교육과 연구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이토록 생 몸살을 앓으며 살아야만 하나. 교수회 평의원 2년 동안 이런 사안을 다루는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회의로써 끝난 것 같다.

2011년 3월 제12대 교수회 출범과 동시에 총장추천위원회 업무도 시작된다. 이때부터 교수회 평의회, 대학평의원회, 총추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위원회가 새끼를 치듯 조직되면서 각종 회의가 꼬리를 물고 회의를 이어간다. 내가 왜 이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나?

'남 따라 장에 간다' 학과 선배교수들, "교수회 평의원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한 번은 해야 한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슬그머니 남 따라 교수회에 들어간다. 통합으로 밀양에서 장전캠퍼스로 옮겨와 물에 기름 뜨듯, 몸에 맞지 않는 옷 입은 듯, 남의 학교에 출강하는 강사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던 시절. 새로 처음 맡은 과목, 학생 수준이 높으니 수업준비는 밤샘 허겁지겁 고군분투할 수밖에. 그럼에도 공사우선, 또 구성원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이거니, 교수회 일원이 되는 것에 내심 기대도 있었다.

첫 학기는 정신없이 지나간다. 총장선거도 아니고, 그 이름 한번 요상한 총장추천선거를 천신만고 끝에 치르니 곧 무효가 된다. 무슨 조화? 다음 학기에 다시 똑같은 선거를 연거푸 치러야한다. 무슨 팔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초유 사태의 와중에 어느새 빠져 버렸다. 2011년 11월 11일 두 번째 선거. 그리고 새로운 총장 선출. 새총장과 교수회와의 밀월을 기대하며 신년을 기다린다. 새총장이 취임하며 교수회 2년차가 시작된다. 밀월의 꿈은 잠시 후 총장직선제 폐지를 기점으로 갈등관계로 회귀한다. 권력과 견제는 영원히 반대편일까?

2. 장돌뱅이

장에서 겉돌기 2년에 장돌뱅이가 되어버렸다. 학교는 학생과 직원, 그리고 교수로 구성된다. 모두 제 본분에 충실하면 발전한다. 그런데 학교가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 현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직선제가 왜 중요한지. 총장실 철야 교수들은 왜 5개월이 지나도 농성을 풀지 않나. 법인화와 성과연봉제는 왜 거부해야 하나. 효원굿플러스 설립과 현황은 어떤지. 정문은 왜 저 모양인지. 공학관 신축에 대한 우려의 이유는 무엇인지? 나도 아는 게 없었다.

직선제 폐지는 자율권 포기로 정부에 전권을 상납하는 통로이다. 직접 선출하지 않은 구성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소신총장? 불편한 진실이다. 농성장 교수들의 한 치 양보 없는 일념불퇴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다.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규칙이 없다는 결함을 가진 제도, 더욱이 시장논리가 적용된 자기약탈적 경쟁구조라는 우려, 법인화는 실패한 구시대 산물, 서울대 같이 자립 자산을 담보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 교내 건축물은 장기 계획 수립과 교정 전체 조망에 맞춰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한다. 등등.

이런 일도 기획처장이 효원굿플러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는 그나마 봄날 나들이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은, 학교가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다는 것, 세속보다 더 추악한, 누가 봐도 불합리한 특혜성 계약조

**강재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건 · 회계조작.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다는 것, 누가 이 지경이 되게 했든 지금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본부의 해결책은 속수무책이란 답변. 결국 "지성이면 감천"이란 주술 이외 달리 방법이 없단다. 본부와 교수회는 이 모든 일의 해결을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지경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데도 사사건건 양보가 없다. 교수회 입장에서 교수회 학칙 명시와 규정심의권 확보, 그리고 직선제 학칙 개정 약속 등은 12대의 성과라 하겠다.

학교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동안 나도 '파란만장'. 교수회 운영위원회에 포함되고, 학과장을 차례가 되어 맡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말년에 한시적 학교발전기획위원회 일원으로 파견된다. 학과장회의, 교수회 운영위원회, 교수회 평의회, 대학평의원회, 학교발전기획위원회. 어떤 날은 회의가 중복되어 이쪽저쪽 오가면서. 입시철, 학부 · 대학원 · 교육대학원의 모든 입시에 학과장은 필히 참가한다. 공모과제와 논문심사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와중에도 발기위에서 생각을 거침없이 토로하며 느끼는 보람. 예전에 몸담았던 밀양캠퍼스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현 소속 사범대학도 만만찮다. 회심의 본부 청사진.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다.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다 2년이 지난다.

3. 한 마디

첫째, 공인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거나 거수기나 2중대원처럼 행동하는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만장일치 의결이라니, 소수 의견도 토론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조폭? 아니면 북한소식? 교수회 평의원도 공인이다. 이런 행태를 따라서는 아니 된다. 공익을 앞세우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정당당하면 사사로움과 치우침은 사라지고 소신과 의견은 명쾌하다.

또 하나, 초지일관해야 한다.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주기 바란다. 평의원이면서도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 회의석상에서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회의 중임에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 그리고 들락날락 그만뒀다 변덕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하는 고언이다. 물론 본업은 연구와 교육이다. 다만 나머지 대다수 교수들이 본업에 더 충실하도록 일정기간 봉사하는 직무이다. 봉사도 제대로 하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구조. 회의가 보통 1시간, 더러 2시간 반 이상 소요되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 안건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본회의로, 본회의에서는 찬성 · 반대 또는 회송만 결정한다. 회송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다. 2년 동안 거의 모든 안건을 전체 본회의에서 결정하려니 비효율적이었다. 학칙 개정으로 심의할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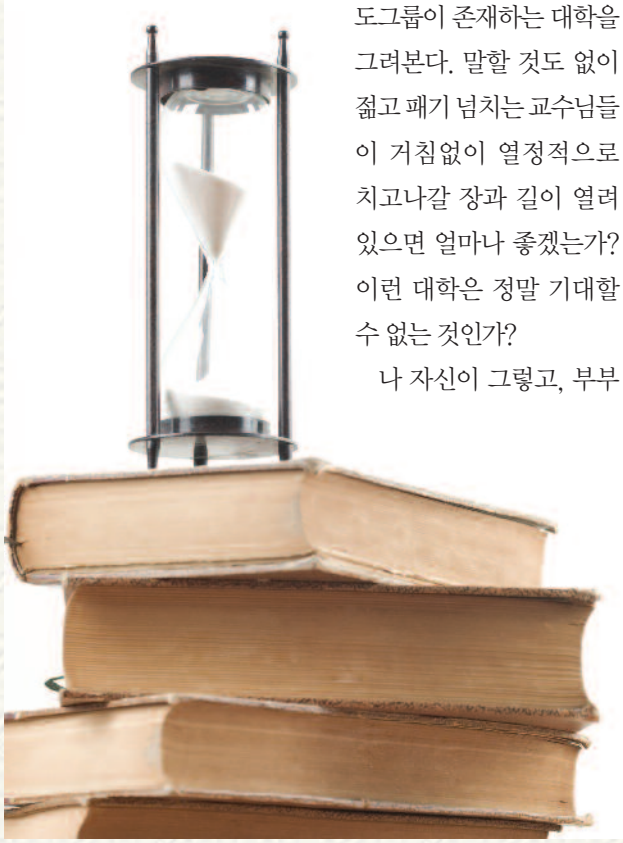
4. 돌아가며

점점 3D 직종으로 전락 중인 교수 직분. 그러기에 학교 안정이 더욱 절실하다. 직면한 난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고 발전과 도약을 이룰 것인가?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요지부동이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나? 서로에 대한 믿음과 회복, 배려, 그리고 모두 하나 되지 않으면 누구도 정년까지 기쁘게 달릴 수 없다.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본부와 교수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평의원을 벗어도 홀가분하지 않다. 미증유의 산적한 난제. 남 따라 장에 가듯 교수회에 몸 담갔다 장돌뱅이만큼 학교 현안에 밀착되어 버렸다. 밀착은 애착이다. 본부와 교수회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 사필귀정. 나는 믿는다.

# 꿈을 이루는 교수/ 여교수의 모습으로…

지도자는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꿈을 이야기하며,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선생은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살짝 꿈을 그리게 하고, 그 꿈을 이루는 노력을 하게하고, 그 고통조차도 즐길 수 있는 혼을 넣어줄 수 있다면 최상이다. 대학이라는 생명체에도 지향하는 꿈이 있고 철학이 있다면, 이 일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을 선도하는 총장, 원로교수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은연 중에 따라가고 싶은 무언가 모를 고뇌, 중량감, 그리고 신선함을 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상적인 선도그룹이 존재하는 대학을 그려본다. 말할 것도 없이 젊고 패기 넘치는 교수님들이 거침없이 열정적으로 치고나갈 장과 길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대학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나 자신이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꿈이 없는 인생,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가 있다. 그는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삶의 본질에 대하여 대학은, 아니 교수들은 늘 고심하는 집단으로 남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전문 영역이든 관계가 없다. 인문학자들만의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참 삶에 대하여, 늘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교수라는 본질과, 여 교수의 특성, 남 교수의 특성이 다 필요하다. 소중한 가치로 조화할 수 있는 대학의 꿈은 정녕 불가능한가? 인류의 역사 이래 교육시스템은 늘 문제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각종 평가의 물리적, 양적 지표도 좋지만, 본질에 대하여 늘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멋진 피드백시스템으로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할 것 같다.

맹모의 교육철학을 들먹이며,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이 유행이다. 편법을 쓰기도 한다. 고관들의 청문회에는 늘 이와 관련한 위장전입이 문제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 이 사회현상을 대학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맹모의 교육철학의 본질은 두세 번의 물리적 이사가 아닐 것 같다. 맹모에게 본받을 본질적 사건 3가지를 열거해보자.

어린 나이에 노나라로 유학을 갔던 맹자가 어머니를 그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화가 그 첫째이다. 맹자의 어머니는 짜고 있던 비단을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크게 꾸짖었다.

"당장 돌아가라. 네가 중도에 돌아온 것은 이 좋은 비단이 이렇게 잘라져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다. 네 인생이 이렇게 토



**이화운**
자연과학대학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막 나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다. 부인의 안방예절을 탓하며 못살겠다고 어머니께 고하였다. 맹모는 며느리를 불러 단호히 단죄하였다. 맹자의 부인은 시어머니의 꾸지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기척도 없이 안방에 들어와서 부인인 내가 정갈한 용모로 늘 웃으며 맞이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안방은 주인인 저의 자유공간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집의 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나는 이집의 주인으로 들어왔지 종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방에서 안주인이 자유롭게 좀 풀어진 용모로 혼자의 시간을 편안히 보낸다고 무슨 소박맞을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맹자의 잘못을 크게 나무랐다.

세 번째 사건은 맹자가 나라의 재상이 되어 왕과 정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였다. 왕이 맹자의 충언을 잘 듣지 않게 되면서, 맹자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맹자는 그런 왕의 곁에서 떠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맹자가 왕궁의 기둥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모습을 훔쳐본 맹모는 단숨에 낙향하였다. "나를 염려치 말라. 너의 소신껏 행동하라."

이 사건들의 면면에서 맹모 교육의 본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맹모의 소통과 단호함에서 맹자는 성현이 될 수 있었다. 철부지인 어린 시절이나, 성인이 된 청년시절, 노년시절에 이르기까지 맹모는 아들 맹자에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호한 지침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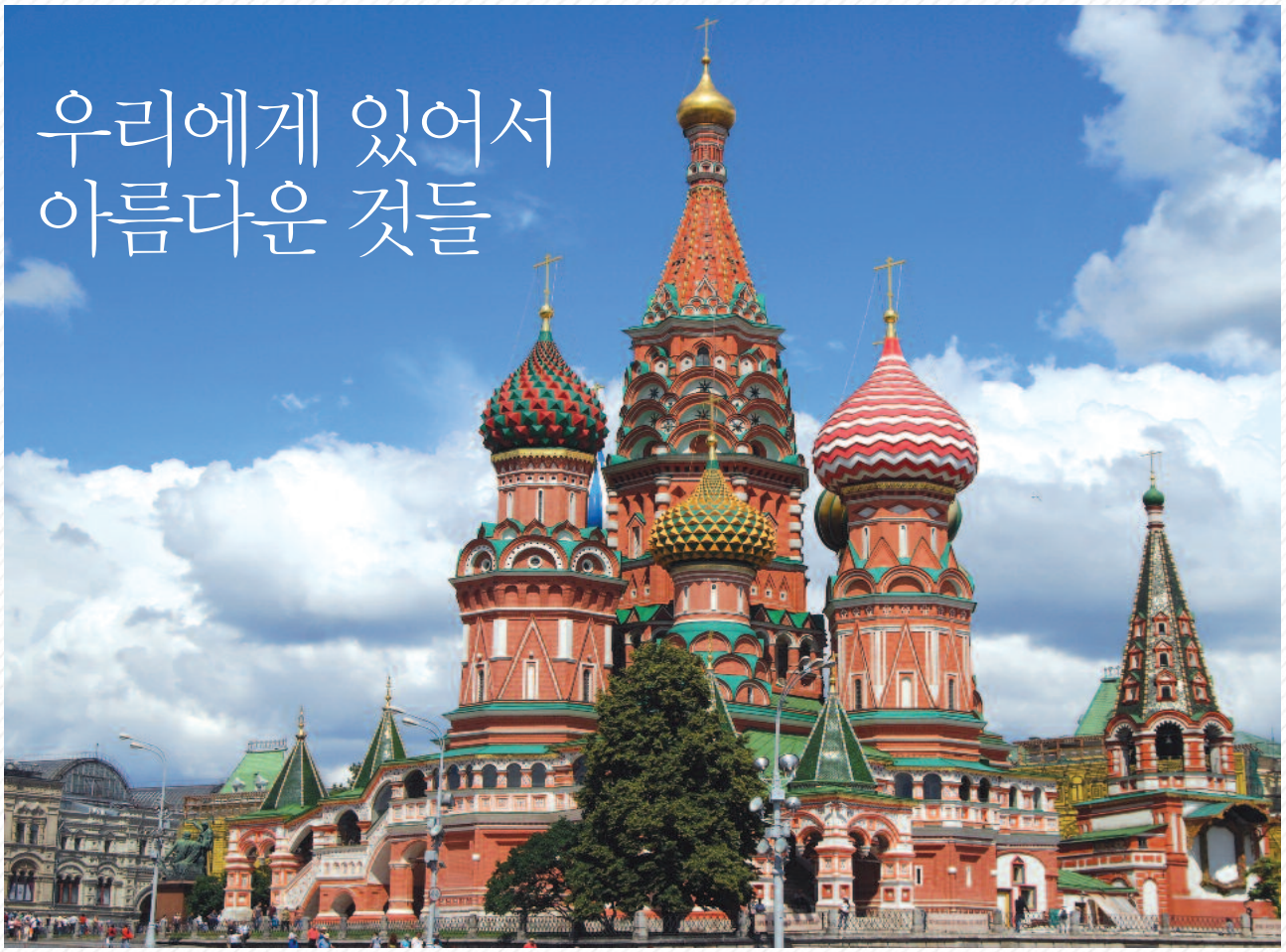
오늘의 우리는 금지옥엽의 아들, 딸에게, 그리고 교육자로서 대학의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매를 들고 있는가? 또 자유롭게 행동할 기회를 주고 있는가?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력(人間力)의 본질을 키우는 매는 크게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대학의 본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자유롭게 살고 있다. 맹자의 부인이 안방의 자유를 이야기 한 의미와 상통한다. 우리가족의 꿈은,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다. 합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종합되는 공통의 과제도 만들어 본다. 누가 뭐래도 우리식의 삶이, 가정이, 누구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만의 소중한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아들딸, 손자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행복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기술을 내려주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소망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나는 아직도 소신에 찬 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우리 대학이라는 조직도 소신에 찬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 국가도 국가의 본질적 비전과 국민행복론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작은 나, 우리 집, 대학에서부터 이 본질에 충실한 비전에 동감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상이었으면 한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우리식구들, 학생들, 동료교수들과 향기 은은한 차를 한잔하는 행복을 느끼고 싶다. 나는 이런 교수올시다! 당신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군요. 꿈이 있는 부산대학교라서 행복합니다. 교수라서, 여자교수라서 더욱 행복합니다. 그것이 정녕 영원한 꿈은 아닐 것이다. 부산대학교를 꿈의 산실로 만들어갈 마르지 않는 샘, 소통과 단호함, 원칙이 그리워진다.

#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시학」에서 "아름다움이란 크기와 질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예술에서도 기하학적인 법칙을 찾아 아름다움을 정의하고자 했다. 만일 예술이 조화이며, 조화가 어떤 비례를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면, 그 비례들은 고정된 것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비례는 피타고라스와 유클리드의 정의로써 확립되었으며, 피보나치 수라고도 하는 황금분할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으로부터 정방형(正方形)을 발견했는데, 황금분할은 이 정방형의 발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의 인체의 비율을 비롯해서 나무의 잎사귀, 바다의 조개 등 그리스의 신전건축물, 신화에 나오는 조각상들, 모나리자 그림, 신라 토기의 기형에 이르기까지 황금분할의 미적인 수치에 일치하고 있다. 이 황금분할은 바로 자연의 질서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神性의 比'(Divine Proportion)라고도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또 다른 미적 구성요소로써 하모니, 밸런스, 리듬, 다양성의 통일 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술의지'를 가지고 있다(Alois Riegl, 1858-1905).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처음 본교에 재직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캠퍼스 정경이었다. 우거진 대나무 숲과, 울창한 솔밭, 조그만 계곡으로 골짜기물이 맑게 흐르고, 울타리도 없는 숲길을 조금만 걸어가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평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산성국수 맛, 솔밭의 향기로운 내음들. 내가 독일 뮌헨 슈바빙에서 갓 귀국한 198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숲이나, 녹색공원, 잔디를 도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였다. 정말 내가 1984년 당시 본교에 공채로 근무하게 된 동기는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보여서였다. 또한 외국여행을 좋아하는 터라 서울의 웬만한 사립대 보다는 외국에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교가 여러모로 훨씬 좋은 탓도 있었다. 그래서 서울로 근무지를 이직하지 않겠노라는 각서까지 제출



**손귀주**
예술대학 조형학과 교수

하고 실제 이를 지켰다.

아름다움에 대해 세계적인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아름다움은 젊음'이라고, 젊은 날의 일상들을 단아하게 묘사했다. 그 젊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이 아름다운 젊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도 나의 일터이자 우리 동료 교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기도하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일까?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를 자주 듣는다. 연주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로 대부분 다른 교향곡에 비해서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곡을 듣노라면 일생의 순간들이 아주 빠른 시간으로 오버랩 되어 지나간다. 이 곡은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음악 감상실에서 숨죽이고 몰래 망을 보면서 감상해야만 했다. 스탈린상을 받은 구 소련의 음악가이기 때문에 반공법 위반으로 문초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은 음악 감상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도 젊음을 만끽하곤 했다. 그리고 자정부터는 통행금지였지만, 그것이 자유를 구속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속박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7번은 그가 실전에 참전했을 때 폭격을 피해 방공호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작곡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평론가들은 이 곡을 제2차 세계대전 중 레닌그라드 공방전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소련 국민이 인내와 용기로써 나치 독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끈 또 다른 저항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그의 저서「증언」에서 밝히기를 교향곡 제7번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구상되었고, 전쟁교향곡이라느니 하지만, '침략의 주제'는 사실 침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주제를 작곡했을 때 인간성에 대한 또 다른 적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 인간성에 대한 또 다른 적! 정의가 수반된 것은 아름다운 질서를 보여주고, 창조와 생산을 위한 에너지이다. 반면에 정의가 없는 힘은 비생산적이며,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된다. 우리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한다.

우리는 대학인이고, 대학인은 학문과 지식을 연구하고 창조하는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류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젊은 용사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캠퍼스의 자율성이 무너지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광경을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엄습해 오는 또 다른 속박감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캠퍼스 안에서 또 다른 적에 대한 아름다운 저항을 외면하는 나르시스는 아닐까?

대학 캠퍼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곳이다. 장전동 캠퍼스는 효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에 걸맞게 가장 아름답다. 오늘 우리의 캠퍼스 크기는 어떠하고, 캠퍼스의 비례는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가? 밸런스는? 하모니는? 다양성의 통일은? 나는 지난해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부터 건강한 캠퍼스를 회복하고 싶다. 효원에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라서, 동해의 붉은 태양을 맞이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구 소련이 붕괴되기 전 나는 모스크바를 여행한 일이 있다. 스탈린의 붉은 광장에서 크레믈린 궁전과 성 바실리 성당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놀라고 말았다.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체된 듯 숨 막히는 듯한 고요 속에 절제된 듯이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정말 아름다웠다.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항상 감시병이 저만치서 우리 일행을 보호 · 감시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나의 감성은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음을 잊을 수가 없다.

대학 캠퍼스의 자율성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누리고 지키는 자들만의 것이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파괴하도록 수수방관해서는 대학인이 아닐 것이다. 다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들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캠퍼스에 대해 꿈꾸어 본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상인 젊음을 생각하면서.

# 마음먹기와 마음내기

外息諸緣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그치고
內心無喘 안으로는 모든 욕심을 비우고
心如墻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장벽이라면
可以入道 가히 도에 든 것이라 할 수 있네



"형님,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밀린 책을 쓰느라 과로를 했더니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다. 허(虛)해진 몸을 달래려 한의원을 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했더니 대뜸 돌아오는 말이 시비조(?)다. 옛날처럼 과로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야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자판을 두들기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란다. 누가 모르나? 약이나 지어 달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더 가관이다. "슬슬 준비를 하셔야죠!" 허허---

"어모털 (a-mortal)족".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말 그대로 늙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만,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60세 생일을 앞두고 런던 마라톤을 완주했고, 63세의 여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손주나 볼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내과의사 제프리 라이프는 72세에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한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꺾은 백년을 지나면 한 해가 지날수록 몸 상태가 다름을 느낀다. 지인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너도 그렇니', '나도 그래'하며 맞장구를 치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까? 정말 그렇게 하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어모털족의 예를 바라만 보고 위가 좋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컨디션이 저조한 것을 한탄만 해야 할까?

어느 날인가, 새벽에 홀로 깨어 스스로를 돌이켜보다 문장 하나가 가슴에 다가옴을 느낀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사물의 움직임에) 응하여 그 사물에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사람을 접하고 만나지만, 그 일과 사람을 대면할 때 적절히 대응하고



**김기홍**
경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결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일과 사물에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 그런가? 다시 한 문장이 다가온다. "Let go! Let God!" 모든 일의 본질은 일시적인 것이니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이 살아있도록 하라. 나의 자아가 살아 사람과 사물을 대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그 사람과 사물을 처리하게 하라. 아, 금강경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같은 곳을 가리키는가? 집착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유지할 것.

그렇다면 지천명(知天命)을 넘은 나이에 나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세월 탓을 하느라 이리저리 구시렁거리기 보다는 정말, 역설적으로, 후배의 말을 따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모털족을 따라하느라 새벽에 조깅을 하고 체육관을 드나들기 보다는, 곧 회복될 몸 상태에 일희일비하느라 감정과 생각을 낭비하기 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쯤 와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더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게 아닌가.

안철수의 친구, 박경철. 그는 안철수가 대권 출마를 선언할 무렵 홀연히 안철수를 떠나 유럽, 그 중에서도 그리스를 여행한다. 그것도 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돌아와서는 이런 요지의 말을 한다. "내가 안철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안철수를 떠나있었던 것이었다." 지독한 절제와 현명함. 그러면서 묵직한 책 한 권을 상재한다. "문명의 배꼽, 그리스". 문명을 상대로 하는 책을 내다니, 그가. 의사이면서, 주식을 통해 한 재산을 모았으며, 경제학자 뺨치게 경제학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으며, 김제동, 안철수와 함께 청춘콘서트로 청년을 위로하던 그가, 이제는 '문명'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내 청춘을 사로잡았던 영혼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들먹이고, 이 시대의 화두인 '힐링'을 거론하면서.

인생도처 유상수(人生道處 有上手).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나보다 상수다. 하지만, 괜찮다. 그나 나나 어차피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이 세상에 소풍을 온 것이니'.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바탕 '꿈'이니, 그때까지 자미나게('재미나게'가 아니다) 잘 놀다 가면 된다. 그러니 그가 조금 일찍 시작했을 뿐이다.

1월의 마지막 날, 봄 학기에 학생들이 사용할 '미래'에 관한 책의 첫 번째 교정을 마쳤다. 컨디션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이제 관심은 그 곳에 있지 않다. 이 연구실에서 내가 '소풍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는 마음을 먹는다. 금강경과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겠다고. 그 먹은 마음을 밑천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낸다. 박경철 그가 문명을 들고 나왔다면 나는 '미래'를 들고 나가겠다고. 하지만, 그 마음내기 마저도 집착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미래' 이전 '협상과 전략'에 몰두할 무렵 나를 사로잡았던 한시(漢詩)를 같이 나누고 싶다.

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墻壁
可以入道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그치고
안으로는 모든 욕심을 비우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장벽이라면
가히 도에 든 것이라 할 수 있네



# 病後雜感



1.

일요일 아침 목욕을 했더니, 한기가 엄습한다. 간밤에 잠을 혼곤히 잤지만, 졸음과 피로가 다시 몰려왔다. 일요일인데 하는 생각에 떨치고 일어났다. 점심을 먹고 「레미제라블」도 보고 서점도 들렀다. 이게 화의 뿌리였다. 집으로 돌아와 몸을 뉘였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근육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해 달라붙은 새끼 악마들 같았다. 치솟는 열은 잠을 빼앗아 갔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뒹굴고 뒤척이다 보니, 창밖이 벌써 훤히 밝았다. 겨우 추슬러 병원에 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날 하루 반짝 했을 뿐 자고나자 증세는 반복되었다. 학교에 아니 나갈 수 없었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걸어 다니는 시체가 되었다. 결국은 집에 내처 드러눕고 말았다. 일어난 것은 앓을 만큼 앓은 뒤다. 따져보니 거의 스무날이다. 속에서 무슨 큰 나무둥치가 빠져나간 듯 휘휘하기 짝이 없다. 털고 집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러다가 더칠 것이 걱정이 되어 다시 누웠다. 하느니 이런 저런 공상이다.

2.

대학에 부임한 지 21년째다.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21년을 지내고 갑자기 든 생각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인문학은 0점이다. 한문 같은 중세의 언어는 취업에 소용이 닿지 않는다. 취업률을 높이려면,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순수과학을 하는 자연과학대학 일부, 또 이런 저런 언필칭 비인기 전공을 모두 없애고, 공과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을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 특히 기계공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약학의 정원을 한 2만 명 정도로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퇴출되어야 하는, 취업 안 되는 전공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20년 정도 연봉을 미리 당겨주고 해고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전지전능한 교과부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농담이다! 지금 취업에 유리한 전공의 정원을 늘려 졸업생을 쏟아내어도 들어갈 취업 자리는 한정되어 있을 뿐이니, 무슨 소용이랴? 대학을 없애고 기업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길러서 쓰면 되지 않겠는가? 공상이다!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는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는 법이다.

3.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인가? 나의 전공인 인문학에 한정해 말하자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물론 있다. 프로젝트와 논문 쓰기가 그것이다. 글쎄, 그런데 개중에는 학문답지 않은 것도 허다할 것이다. 아니, 학문이란 말의 의미도 이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학문과 상관없는, 평소 공부 혹은 연구와는 담을 쌓은 사람이 무슨 학술대회니 뭐니 하는 모임에 나가서 학문과 연구에 대해 거룩한 격려사를 늘어놓는 것을 보거나 듣고 있자면, 쓴 웃음이 절로 난다. 하기야 이것이 어디 인문학만의 문제랴?



**강명관**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

연구가 중요하다 해서 연구로 점수를 매기고 연봉을 차등 지급한다면, 누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칠 것인가. 자발성이 없는 연구, 월급을 더 받기 위해 하는 연구가 무슨 의미 있는 연구일까?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오직 평가의 대상이 되면, 자존감과 긍지를 잃고 만다. 이제 대학 교수에게 자존감과 긍지라는 것이 남아나 있을까? 자존과 긍지가 사라진 대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 부산대학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육과 연구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4.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기는 행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선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주의란 호사스런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한 사람의 독재자에게 통째 넘겨주는 절차인 것 같다. 그 절차가 끝나면 민주주의는 씻은 듯 사라지고 만다.

권력의 거대한 사이즈 때문에,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에 남보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사람들이 선거에 목을 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남보다 유능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그러기에 당선되기 위해 사람들을 호릴, 그럴싸한 약속을 내건다. 너무나 황홀하기에 그 약속만 지킨다면, 그 공약만 실현된다면, 파라다이스가 도래할 것 같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그랬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대학도 다를 바 없다. 총장 선거는 지키지 못할 약속의 전시장이다. 대학의 발전, 대학의 자율, 교수의 권익을 위해 교과부와 한판 장렬한 싸움을 벌여보겠노라, 궁색한 학교 재정을 일거에 해결할 거대한 발전기금을 모으겠노라 약속한다. 물론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다. 당선되기 위해 내건 미끼일 뿐이니까.

당선된 뒤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면, '미안하다',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자니 학교가 망하게 생겼다'는 등의 말로 넘어간다. 그것뿐이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넘겨받은 권력을 쥐고 있다. 선출된 사람은 그 권력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뿐인가. 말 잘하는 수하도 거느리고 있다. 약속을 안 지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연히 약속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사람만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가 되고, 학교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게 진리와 자유와 봉사를 내세우는 대학이다. 그래도 항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게 교수다. '죽은 민주주의의 대학'이다.

5.

부임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교유의 범위가 좁은 나 역시 사람을 적지 않게 알게 되었다. 모두 머리 좋고, 말만 하면 고개를 끄덕일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 분은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정보를 알아내었을까?' 하며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대개의 경우 대학 내의 부당하고 不義한 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물론 말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언제나 논리정연하게 '사석'에서 날을 세울 뿐이다.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비판을 받으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변명을 더없이 훌륭히 마련하였다. 그 변명을 들어보고는 혀를 차며 감탄하게 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해 본 적이 없다. 요즘은 차라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솔직하게 구는 사람이 더 낫다는 생각도 해본다.

겨울이다. 공자님 말씀에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라고 했는데, 캠퍼스 곳곳에는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 교수 동정

- **박성수**(건축공학과 교수)
  '2012 건축의 날' 기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 **박재진**(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광고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김동철**(사학과 교수), **윤애선**(불어불문학과 교수),
  **차철욱**(한국민족문화연구소교수), **김인**(공공정책학부 교수),
  **윤성민**(경제학부 교수)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기초학문육성 10년' 대표성과에 각각 선정

- **유학선**(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우수논문상 수상

- **박종천**(조선 · 해양공학과 교수)
  한국해양공학회 논문상 수상

- **박근태**(산학협력단 교수)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권순복**(언어정보학과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교육개발원 · SBS 공동주관 '대학 100대 명강의'에 '일반음성학' 선정

- **김창석**(인지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2012년 2건의 산업체 기술이전 성공으로 부산대 사상 최고 금액의 산학협력 성과 달성

- **김영환**(교육학과 교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 **김용태**(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저널인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온라인 속보판에 게재

- **오민철**(전자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년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

• **김유신**(전자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출

• **이상금**(독어교육과 교수)
한국독일어문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

• **강명관**(한문학과 교수), **오정일**(미생물학과 교수), **윤부현**(생명과학과 교수), **김명현**(조선 · 해양공학과 교수), **홍순헌**(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정재준**(기계공학부 교수), **황영성**(스포츠과학부 교수), **포어**(국제학부 교수), **문형룡**(약학부 교수), **한정원**(주거환경학과 교수), **백재봉**(조경학과 교수), **민영성**(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기계기술연구원 교수), **문유석**(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 2012년도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 **장덕현**(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김호원**(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지식경제부 IoT 관련 산업융합원천과제 책임자 및 주관 수행기관으로 선정

• **박병현**(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사회복지와 문화'(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중국어 번역판 출간

• **안영철**(건축공학과 교수)
대한설비공학회 '최상홍 신진교수상' 수상

• **김무성**(경영학과 교수)
한국금융공학회 회장에 선출

• **백점기**(조선 · 해양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영국왕립조선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 **장세복**(분자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세계적인 구조생물학 전문학술지 〈Acta Crystallographica Section D: Biological Crystallography〉 1월호 온라인판에 게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
| • 박상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명예교수 별세 | 발인 : 2012년 11월 26일(월) |
| • 김상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장모 별세 | 발인 : 2012년 11월 29일(목) |
| • 이기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모친 별세 | 발인 : 2012년 11월 29일(목) |
| • 김혜성 나노과학기술대학 나노소재공학과 교수 부친 별세 | 발인 : 2012년 12월 1일(토) |
| • 오점량 사범대학 교육학과 명예교수 별세 | 발인 : 2012년 12월 3일(월) |
| • 이동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장인 별세 | 발인 : 2012년 12월 9일(일) |
| • 박태주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 장모 별세 | 발인 : 2012년 12월 18일(화) |
| • 조태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모 별세 | 발인 : 2012년 12월 19일(수) |
| • 김진연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부친 별세 | 발인 : 2013년 1월 7일(월) |
| • 권혁숭 생명자원과학대학 IT응용공학과 교수 부친 별세 | 발인 : 2013년 1월 19일(토) |
| • 정태성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교수 장인 별세 | 발인 : 2013년 1월 31일(목) |
| • 김문규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장인 별세 | 발인 : 2013년 2월 12일(화) |
| • 김충락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 부친 별세 | 발인 : 2013년 2월 16일(토) |
| • 조송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장인 별세 | 발인 : 2013년 2월 28일(목) |
| • 조홍래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장인 별세 | 발인 : 2013년 3월 2일(토) |
| • 강성철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 장인 별세 | 발인 : 2013년 3월 5일(화) |

# 부산대학교 제12대 교수회 조직 및 구성

2011. 3. 1 ~ 2013. 2. 28

| 전체교수회 | 직 책 | 성 명 | 대 학 | 학 과(부) | 연구실 | 학과 |
|---|---|---|---|---|---|---|
| 임원 | 교수회장 | 이병운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 1225 | 1611 |
| | 부 회 장 | 이시복 | 공과대학 | 기계공학부 | 2315 | 1420 |
| | 부 회 장 | 이정섭 | 의학전문대학원 | 정형외과학교실 | 240-7982 | |
| | 부 회 장 | 한지숙 | 생활환경대학 | 식품영양학과 | 2836 | 1718 |
| | 감 사 | 문채규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3722 | 1577 |
| | 감 사 | 서명숙 | 사범대학 | 불어교육과 | 2621 | 1613 |

| 평의회 | | 직 책 | 성 명 | 대 학 | 학 과(부) | 연구실 | 학과 |
|---|---|---|---|---|---|---|---|
| 임원 | | 의 장 | 이병운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 1225 | 1611 |
| | | 부 의 장 | 이시복 | 공과대학 | 기계공학부 | 2315 | 1420 |
| | | 부 의 장 | 이정섭 | 의학전문대학원 | 정형외과학교실 | 240-7982 | |
| | | 부 의 장 | 한지숙 | 생활환경대학 | 식품영양학과 | 2836 | 1718 |
| | | 총무간사 | 이철순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과 | 2100 | 1558 |
| | | 기획간사 | 장덕현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 2102 | 1562 |
| | | 연구간사 | 문용환 | 자연과학대학 | 분자생물학과 | 2592 | 1775 |
| | | 홍보간사 | 우 균 | 공과대학 | 정보컴퓨터공학부 | 3518 | 1436 |
| 상임위원회 | 기획위원회 | 위 원 장 | 강재원 | 사범대학 | 영어교육과 | 1040 | 1612 |
| | | 간 사 | 박정심 | 인문대학 | 철학과 | 2070 | 1514 |
| | | 위 원 | 정윤철 | 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 2729 | 1769 |
| | | 위 원 | 최영선 | 공과대학 | 화공생명공학부 | 2396 | 1431 |
| | | 위 원 | 이해정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2106 | 1557 |
| | | 위 원 | 김철기 | 예술대학 | 디자인학과 | 8344 | 8306 |
| | | 위 원 | 윤석찬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908 | 1736 |
| | | 위 원 | 안순철 | 의학전문대학원 | 미생물학 및 면역학교실 | 8092 | 8090 |
| | | 위 원 | 신상훈 | 치의학전문대학원 |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055-360-5113 | |
| | 학사위원회 | 위 원 장 | 김동화 | 사범대학 | 수학교육과 | 2661 | 1622 |
| | | 간 사 | 김부근 | 자연과학대학 | 해양시스템과학과 | 2212 | 1774 |
| | | 위 원 | 정원섭 | 공과대학 | 재료공학부 | 2386 | 1429 |
| | | 위 원 | 이수훈 | 인문대학 | 사학과 | 2386 | 1429 |
| | | 위 원 | 황아란 | 경제통상대학 | 공공정책학부 | 2124 | 7668 |
| | | 위 원 | 정수란 | 예술대학 | 음악학과 | 2912 | 1737 |
| | | 위 원 | 황윤회 | 나노과학기술대학 | 나노소재공학과 | 5274 | 5270 |
| | | 위 원 | 이병주 | 의학전문대학원 | 이비인후과학교실 | 240-7675 | |
| | | 위 원 | 서형식 | 한의학전문대학원 | 임상의학2부 | 8465 | 8403 |
| | 재정위원회 | 위 원 장 | 이찬호 | 경영대학 | 경영학과 | 2542 | 1660 |
| | | 위 원 | 하충룡 | 경제통상대학 | 무역학부 | 2583 | 1657 |
| | | 위 원 | 윤성환 | 공과대학 | 건축학과 | 2355 | 1487 |
| | | 위 원 | 김종관 | 경영대학 | 경영학과 | 2537 | 1659 |
| | | 위 원 | 이재우 | 국제전문대학원 | | 3727 | 1663 |
| | | 위 원 | 정연진 | 약학대학 | 제약학과 | 2527 | 3216 |
| | | 위 원 | 손병구 | 생명자원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 5521 | 5520 |
| | | 위 원 | 차재호 | 자연과학대학 | 미생물학과 | 2196 | 1773 |
| | | 위 원 | 정 진 | 치의학전문대학원 | 구강미생물학교실 | 8247 | 8245 |
| | 복지위원회 | 위 원 장 | 이정란 | 생활환경대학 | 의류학과 | 2841 | 1719 |
| | | 간 사 | 송우진 | 산학협력단 |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 2493 | 3693 |
| | | 위 원 | 박관수 | 공과대학 | 전자전기공학부 | 2788 | 1428 |
| | | 위 원 | 정영진 |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소재과학과 | 5387 | 5380 |
| | | 위 원 | 신상근 | 스포츠과학부 | | 3547 | 3745 |
| | | 위 원 | 이수봉 | 의학전문대학원 | 내과학교실 | 055-360-2371 | |
| | | 위 원 | 정한솔 | 한의학전문대학원 | 한의학과 | 8461 | 8403 |
| | | 위 원 | 조소영 |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516 | 1574 |
| | | 위 원 | 박창언 | 사범대학 | 교육학과 | 2794 | 1615 |

부산대학교 교수회
Faculty Council Pusan National University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Tel.** 051-510-1225 / **Fax.** 051-515-2236
**E-Mail.** chairman@pusan.ac.kr / **Homepage.** http://faculty.pusan.ac.kr